

3.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6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시민안전실장)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8일
- 상정일자 :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5일), 수정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재난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제3조에서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제10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 중 민간 전문가 참가비율을 당초 1/3에서 1/2로 확대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이 개정조례안은

- ▶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 안 제3조 관련 별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사용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20.1.7.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는 것임.

개정전 시행령은 사용용도를 10가지로 명시⁵⁾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열거주의(포지티브)방식이었으나,

5) (개정전 기금의 사용용도)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된 시행령은 포괄주의(네거티브)방식으로 개정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⁶⁾만 규정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여, 재난 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되었음.

이를 반영하여 본 개정안에서도 기금 사용용도를 3가지로 구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대구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는 개정안의 사용용도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참고 2], 용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재난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보다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대구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는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6) **현행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현행 조례에서는 재난이 우려되는 사유시설에 대해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점검용역 등 시설 점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긴급 안전조치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한 것임.

다만, 본 규정이 대구광역시 또는 8개 구·군 이외의 자가 소유·점유한 사유시설에 대해 규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대구시 또는 자치구” 문구는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

- ▶ 안 제10조에서는 개정된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행안부, 2020. 1월)의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위원 구성시 민간전문가의 수를 현행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민간분야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음.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시행령 개정의 기조를 반영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고, 행안부의 개정된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 다만, 재난관리기금의 수요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같은 전염병 발생 등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확대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기금운용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책임성 강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 1**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현황**

○ 적립현황(2020.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 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기타		
재난관리기금	9,534	931	6,620	1,871	112	7,590	1,944
시비(기금)	2,914	931	-	1,871	112	1,022	1892
국비	6,620	-	6,620	-	-	6,568	52

○ 집행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집 행 내 역	집 행 액
2020년 (9월말 기준)	소 계	759,024
	긴급재난지원금	620,684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55,300
	코로나19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의료비	33,696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특별지원	21,310
	의료기관 지원 등 출연금	5,168
	코로나19 대응 의료장비 등 구입	2,505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사업	1,699
	내진성능 평가 등 방재관련 용역 및 공사	532
	기타 각종 지출	18,13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집 행 내 역	집행액
2019년	소 계	1,492
	겨울철 제설장비 구매	567
	취약계층 소방기구 무상보급	262
	빗물펌프장 개선 및 현대화 용역	319
	위원회 심의 수당	2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147
	내진성능평가 용역	72
	자연재난 예방 홍보 등	29
	스마트 그늘막 설치	93
	자연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 원가계산 용역	1
2018년	소 계	5,273
	화재안전특별조사	865
	재난예경보 및 지진대피소 시스템운영	34
	자연재해 예방 홍보 등	245
	폭염, 폭설 및 한파대책 지원	253
	황사마스크 구매	86
	내진성능평가 용역	3,279
	공공시설 보수,보강	197
	지진패키지 디자인 용역	77
	겨울철 제설장비 구매	237

참고 2

현행 대비 기금 사용용도 비교

현행(제3조 관련 별표)		개정안 (제3조 관련 별표)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1) 장비 및 시설 임차, 교육 및 훈련 콘텐츠 제작 2) 소모품 구입, 홍보, 민간인 여비, 급식비, 평가수당 등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	제1호가목
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제1호마목
라.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단, 준설은 하천의 당초 하폭수심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제1호라목
마.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	제1호다목
바.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가·긴급정밀)	⇒	제1호라목
사. 재난이 우려되는 사유시설에 대한 점검 1)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2)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검 용역(정밀안전진단 제외) 단,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임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제2호
아.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지방자치 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함)의 보수·보강, 철거	⇒	제1호라목
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	제1호마목
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	제1호마목
카.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	제1호하목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보수·보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	⇒	제1호라목
3.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보수·보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단, 방재시설인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은 제외(보수·보강만 가능)	⇒	제1호사목
4.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제1항) 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 1)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 시설 2)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계측 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3)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	제1호아목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 수 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다.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등	⇒	제1호자목

<p>라.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용수시설 보수보강, 소형 간이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등 2) 관정개발, 소규모 용수관로 설치(댐 또는 강으로부터의 대형송수관 설치 등은 제외) 단, 사유시설은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며, 항구복구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p>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p> <p>긴급구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소방본부, 소방서)가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 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구입(국민안전처 고시 구조장비기준 [별표1])</p>	⇒	제1호차목
<p>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p> <p>가. (감염병)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 격리자 지급 생필품위생용품 등</p> <p>나. (가축질병) 이동통제소·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단,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구입과 장비의 임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종 감염병 등 사전 대비가 어려운 재난이 발생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p>	⇒	제1호카목
<p>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용자</p> <p>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p> <p>나. 주택 임차비용을 용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단, 구청장·군수가 대피명령 또는 위험구역 설정 후 출입금지제한 등의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와 강제대피 조치로 인한 이주민에 대한 지원 및 용자</p>	⇒	제1호타목
<p>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p> <p>가.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p> <p>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p> <p>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 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p> <p>라.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p> <p>마.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시설 안전진단 등</p>	⇒	제1호나목
<p>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p> <p>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인력 인건비와 상담활동비 2) 출장경비, 물품구입비 등 기타 운영 경비 <p>나. 재난심리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의 상담활동을 위한 경비</p> <p>다.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경비</p>		제1호파목
<p>11.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단,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p>	⇒	제3호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안 별표의 재난관리기금 민간분야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대구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라는 문구는 8개 구·군을 모두 포함하기에 부족한 표현이라 보이므로 정확한 명칭을 답아야 한다고 보는데?		○ 동의함. 구·군을 명확히 규정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한 충분한 심의와 심도 있는 논의결과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민간 분야 사용시 적용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별표 제2호 중 “대구시 또는 자치구”를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 붙임 ‘위원회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제2호 중 “대구시 또는 자치구”를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p><u>[별표]</u>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제3조 관련)</p> <p>1.(생 략)</p> <p>2. <u>대구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u> <u>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u> <u>안전조치</u></p> <p>3.(생 략)</p>	<p><u>[별표]</u>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제3조 관련)</p> <p>1.(제출안과 같음)</p> <p>2. <u>대구광역시 또는 구·군</u>----- ----- ----- -----</p> <p>3.(제출안과 같음)</p>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구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예산·도로·물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제7항 본문 중 “제5항제3호”를 “제5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제3조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 나. 재난 예방·대비·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 라.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원 인건비
- 바.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수당 및 경비
- 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차.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 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파.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상 산사태 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 지역에 위치한 시설
-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